

지식공유

2026
VOL. 01

Brief

[지식공유브리프 아카이브 바로가기](#)

개발협력/지식공유 이슈톡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6-2030)
수립 그 이후: 한국 개발협력의 나아갈 길 [🔗](#)

Revitalising the narrativ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policy:
The case of Germany [🔗](#)

개발협력/지식공유 동향 분석

인도네시아 플랫폼 경제 현황 [🔗](#)

KSP 포커스

[2024/25 인도네시아 KSP]
인도네시아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녹색투자 촉진과 제도적 과제 [🔗](#)



CIID 연구포커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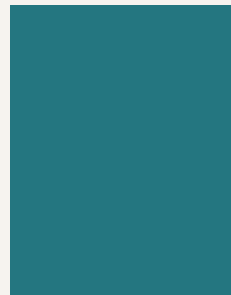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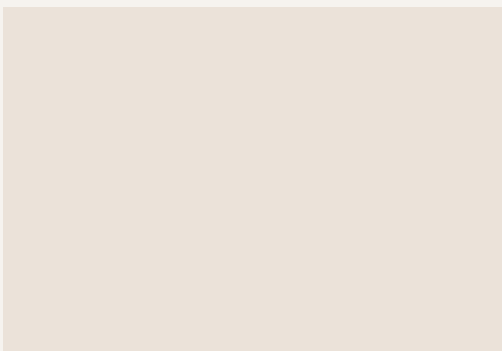
아태지역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영향 및 대응 방안 [🔗](#)

YKSP 소식

KSP 출장 소회 서면 인터뷰 [🔗](#)

행사

ADBI 정책 라운드테이블
"Shaping Asia's Future Prosperity with
Quality Growth" [🔗](#)



* 이 자료는 국제개발협력/지식공유 현안에 대한 이해증진과 국제개발협력센터 업무/성과 홍보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개발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6-2030) 수립 그 이후: 한국 개발협력의 나아갈 길



한승헌

한국행정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소장

hansh@kipa.re.kr

- 1) (영국) '27년까지 축소 (GNI 대비 0.5→0.3%), (프랑스) '25년 37% 삭감, (독일) '25년 18억 달러 삭감.
- 2) (JICA) "개발협력은 일본 국약에도 기여 필요" ('22~'26 제5기 중기계획).
- 3) 2024년 기준, 우리 국민 (만 19세 이상 성인) 77.8%가 우리 정부가 개도국에 ODA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이러한 찬성 답변은 ('16)80% → ('17)86.7% → ('19)81.3% → ('21)76.0% → ('24)77.8%로 감소 추세임 (한국행정연구원, 2025).
- 4) 이 연구는 국무조정실이 발주하고,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책임: 한승헌)이 주관하고 국제개발협력학회가 공동으로 수행했다(한승헌 외, 2026). 이 연구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적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대내외 환경분석, 3차 기본계획 이행 평가, 4차 기본계획(안) 도출을 주요 골자로 한다. 연구의 전 과정에서 발주처인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뿐만 아니라 재정경제부, 외교부 등 주요 관계 부처 및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였다(2025.11.18, 대국민 공청회 개최).

1. 국제개발협력 지형 변화와 딜레마

최근 국제개발협력은 대대적인 전환 국면에 접어들었다. 미국의 USAID(미국 국제개발처) 해체 결정과 함께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 공여국에서 재정 부담을 이유로 ODA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¹⁾ 노골적인 자국중심주의 기조가 강화되고 있다.²⁾ 이와 동시에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 인도, 브라질 등 신흥 공여국들이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글로벌 개발협력 지형은 더욱 다극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개발협력이 더는 순수한 인도적 차원에 머물지 않고, 외교·안보·경제 전략과 긴밀히 결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우리나라 ODA는 양적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2024년 ODA 예산은 전년 대비 약 31.1% 증가한 6조 2,629억 원을 기록했고, 2025년에는 전년 대비 약 3.8% 증가한 6조 5,010억 원이 지원됐다(ODA Korea, 검색일: 2025.4.2.). 다만, 올해 ODA 규모는 약 5조 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6%가량 감액되었다. 그 배경에는 최근 급격히 확대된 ODA 예산의 정상화, 사업성과 중심의 구조조정, ODA 이행체계 개선에 대한 정부의 방향성이 반영되었다(김성웅, 2025.8.29; 남정민, 2025.8.29). 결국 ODA 규모 축소의 근본적인 이유로는 그간 급속한 양적 확대에 비해 질적 내실화는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더욱이 ODA에 대한 국민 인식 역시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어(한국행정연구원, 2025)³⁾ 향후 국민이 지지하는 ODA 정책 추진에 중대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를 둘러싼 개발협력의 지형은 공여국들의 국익 중심 기조 강화와 국가 재정의 제약,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결합된 복잡한 양상으로 변모됨으로써, 글로벌 보편가치의 지속적인 추구하고 국익의 조화, 국민 지지 기반 확보의 딜레마에 봉착했다.

2.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6-2030) 수립의 의미

이처럼 복잡다단한 국내외적 변화 속에서 2025년에는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6-2030)(이하, 4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가 추진되었다.⁴⁾ 이 계획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종합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국가법정계획이자 우리나라 개발협력의 최상위 정책으로서 공공성과 강제성을 지니며, 개발협력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메타정책(metapolicy)으로 다양한 행위자 간 조정 수단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중요하다(한승헌, 2025a: 3). 이는 곧 4차 기본계획이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국민이 직접 공청회 등을 거쳐 정책형성 과정에 참여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공적 기준으로 작용한다(한승헌, 2025a: 6).

이렇듯 그 자체로 큰 중요성을 지니는 4차 기본계획은 국제개발협력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맞물려 수립 그 이후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자료: 저자 제공

3. 기본계획 수립 그 후: 우리의 과제

1)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목적과 지향 가치의 선명화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나라 ODA가 국제개발협력의 존재론적 목적인 글로벌 보편가치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빈곤퇴치에 기여해야 한다는 당위와 제한된 재정 여건 속에서 국익과 국민 지지를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현실적 요구 사이 구조적인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이다. 4차 기본계획 연구 과정에서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하였지만, 향후 ODA 정책은 이러한 긴장을 회피하기보다는 더욱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논의함으로써 개발협력 본연의 목적과 장기적으로 널리 향유할 수 있는 국익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국제개발협력의 규범과 원칙을 존중하면서 이를 단기적 시혜가 아닌 중장기적 투자로 인식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경제적 이익과 비경제적 이익의 이분법적 시각을 넘어, 개발협력으로 실현되는 공존과 협력의 가치가 결국 우리 모두의 번영임을 인식해야 한다.

2) 통합체계 정비로 사업구조 개선과 효과성 향상

현재 우리나라 ODA는 중점협력국을 다수 지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국가에 대한 자원 집중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다. 27개 중점협력국 중 OECD/DAC 회원국 전체 공여액 대비 우리나라 ODA 비율이 5%를 초과하는 국가는 일부에 불과하여⁵⁾ 상대적으로 우리 원조의 존재감이 적은 편이다(한승헌 외, 2026). 이는 ODA를 통한 대외정책의 실효성을 제약할 뿐 아니라 개발 성과 창출 측면에서도 한계를 나타낸다. 특히, 아시아 지역처럼 우리나라의 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들조차도, 다수의 시행기관과 사업이 병렬적으로 추진되면서 분절성과 비효율성이 누적되고 있다.⁶⁾ 이러한 구조는 거래비용을 증가시키고, 전략적 개입보다는 개별 사업 단위의 산발적 성과에 머물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향후에는 중점협력국의 수를 전략적으로 조정하거나 '핵심 중점협력국'을 선별하여 자원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핵심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유·무상 연계 패키지, 민관협력, 다자협력 등 고효과·고가시적 사업유형의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함으로써 단순한 지원 규모 확대가 아니라 질적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 이러한 사업의 효과성을 향상하려면 이를 관리·검증할 수 있는 일관되고 통합적인 체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5) 인도, 네팔, 파키스탄, 이집트 등은 OECD/DAC 회원국 전체 공여 규모 대비 우리나라 ODA의 비율이 5% 미만으로, 절대 지원액 규모가 작아 우리나라의 존재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한승헌 외, 2026).

6) 주요 중점협력국별 ODA 지원규모 및 시행기관(사업) 수를 살펴보면, 캄보디아 4,352.7억 원 (19개 기관, 89개 사업), 인도네시아 2,419.7억 원 (17개 기관, 79개 사업), 베트남 1,950.8억 원 (18개 기관, 93개 사업), 필리핀 1,563.3억 원(11개 기관, 61개 사업)임 (관계부처합동, 2025년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

3) 중점 지원 분야의 전략적 추진

향후 우리나라 ODA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는 비교우위가 분명한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을 구체화해야 한다.

첫째, 공중보건 등 보건의료 분야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한국의 대응 경험과 역량이 국제적으로 검증된 영역이다. 단기적 재난 대응을 넘어 예방·대비·회복력을 포괄하는 통합적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지원하고, 디지털 기술과 결합한 의료전달체계의 효율화, 제도 및 인적 역량 강화로 지속 가능한 보건 역량 구축에 기여해야 한다.

둘째, 디지털 전환과 AI 분야는 전자정부(이하, 디지털정부) 사업으로 축적된 우리나라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 행정역량 강화와 삶의 질 개선에 동시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 분야이다. 다만, 인프라 구축이나 기술 이전에 그치지 않고 제도·규범·관리체계 설계와 병행하는 수원국 맞춤형 접근이 중요하다. 디지털 전환 전략과 AI 관련 사람과 인프라, 제도가 상호작용하는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통합 프로그램을 기획해야만 지금까지의 시행착오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디지털정부 사업 중심의 협소한 접근을 넘어 제도·거버넌스·조직·절차 전반을 포괄하는 행정체계 구축과 인적 역량 강화를 결합한 통합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수원국 국가역량 강화'라는 공공행정 ODA 본연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는 데 핵심 요건이다.

끝으로, 최근 K-컬처의 국제적인 인지도 상승으로 문화 ODA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문화 ODA를 추진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의 문화를 전파하는 수단으로서 ODA가 아니라, 수원국의 문화 자생력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수원국 국민의 문화 향유를 돕고, 문화 수준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있다. 앞서 언급한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ODA 경험이 부족한 문화 분야의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문화 발전과 향유의 역사적 과정을 체계화하고, 개도국 문화 콘텐츠 개발 지원을 강화하며, 분쟁과 기후위기에 따른 문화재 소실을 예방하는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한승헌, 2025b).

이처럼 4차 기본계획에서는 우리 개발협력이 나아갈 방향과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함께 제시한다. 우리 개발협력이 난제(wicked problems)가 상존하는 환경 속에서도 협력과 공존의 가치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길 기대한다. ■

참고자료

관계부처합동(2025). 2025년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제25-1호).

김성웅(2025.8.29). "ODA 분야 예산 1조원 이상 감소...한국 외교 위상 '흔들' [2026 예산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1541988/?utm_source=chatgpt.com (검색일: 2026.1.12.)

남정민(2025.8.29). "1,300개 사업 예산 깎아냈다...ODA는 1.2조 삭감". [2026년 예산안]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8299185i?utm_source=chatgpt.com (검색일: 2026.1.12.)

한국행정연구원(2025). 2024년 ODA 국민 인식 조사.

한승헌(2025a).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6-2030) 수립의 의의와 과제. KIPA 국제개발협력정책 이슈브리프, 2025, vol. 1. 한국행정연구원.

한승헌(2025b). "문화 ODA 20년, 지속가능한 국제개발협력을 향한 새로운 도약" 토론문. 2025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 ODA 포럼. (2025.8.12, 토론문의 일부 내용 재정리)

한승헌 외(2026).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6-2030)」 수립 연구.

ODA Korea. <https://www.odakorea.go.kr/>. (검색일: 2025.4.2.)

Revitalising the narrativ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policy: the case of Germany



Niels Keijzer

Senior Researcher,
German Institute
of Development
and Sustainability (IDOS)

niels.keijzer@idos-research.de

2025년 미국의 USAID 해체와 주요 공여국들의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삭감 등 국제개발협력의 지형이 급변하는 가운데, 독일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예산 감축을 유지하며 세계 최대의 ODA 공여국으로 부상했다. 같은 해 5월에 새로 출범한 독일의 연방경제협력개발부(BMZ)는 이러한 국제적 위상 변화와 ODA에 대한 독일 내 부정적 여론에 대응하고자 2026년 1월 새로운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은 공적개발원조를 단순한 인도적 지원이 아닌 독일의 국익과 안보를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재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아·빈곤·불평등 완화, 평화 증진, 경제 협력, 전략적 동맹 강화를 4대 목표로 설정했으며, 독일 기업의 현지 진출 지원 및 최빈국에 상환 의무가 없는 보조금(Grant) 확대 등 실질적인 운영 체계 개편을 통해 독일 개발 정책의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Introduction: accidentally becoming the largest donor in the world

Notwithstanding alarming news magazine pieces about the state, resilience and future of its economy, Germany ended the year 2025 as the third largest economy in the world, after the USA and China and only slightly ahead of Japan. At the start of that same year, the new US administration introduced a wave of executive orders that included the dismantling of USAID, until then the largest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worldwide. The executive order resulted in a mass cancellation of programmes and staff contracts worldwide and immediate adverse effects on the programmes intended beneficiaries. Only a small number of remaining USAID programmes were continued under the management of the State Department.

Germany was the second-ranking provider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in 2024, and it is expected that preliminary OECD figures for 2025 that are due in April 2026 will rank it as the largest ODA provider in the world. That leading position is assumed in a shrinking landscape: in June 2025 the OECD projected that collective ODA of all providers would fall by anywhere between 9% and 17%, after having already shrunk by 9% the year before. Germany had also made small cuts to its ODA budget in recent years, with the largest by far being a 53% reduction of its spending on humanitarian aid from 2024 to 2025. Yet its ODA cuts have been less dramatic and abrupt than those of the US, as well as budgetary cuts introduced by France and the United Kingdom.

Plenty of publications explore the reasons behind and motivations for making such ODA cuts, where they are made and how different OECD members compare to one another. Some point out how many OECD states had managed to maintain these

large budgets during the past decade and a half by taking up an increasing number of new responsibilities and objectives. Key examples include the increasing expenditure on in-country refugee costs, mainly reported as ODA by European countries, or by expenditure on “global public bads” such as epidemics and climate disasters. Another example is the considerable level of European financial support to Ukraine, which led to the country becoming the largest recipient of ODA in history in 2024. The proliferation of goals and objectives pursued by the ODA budget also gave rise to a growing gap between what the general public thinks is done in development cooperation, and that what is actually being done.

For this reason, international development actors have made efforts to revitalise the overarching narrativ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policy. Given the stark heterogeneous portfolio of actions funded through ODA budgets, the elaboration and communication of such a narrative helps to convey and defend what all these actions ultimately contribute to, and explain the role of development policy vis-à-vis other areas of public policy.

Germany’s current federal government entered office in the late spring of that same eventful year 2025. Unlike most members of the OECD, in Germany development policy is not primarily shaped b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but is led by a full cabinet rank development minister that oversees the federal ministry of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BMZ). In 2024, this ministry managed the majority of Germany’s ODA budget, with the rest administered by other ministries or concerning other ODA-eligible expenditures such contributions to the EU budget and domestic refugee expenditure. As one of her first actions after assuming the leadership of the BMZ, the new minister brought together ministry officials from different directorates general into a new ‘reform unit’. For more than half a year, the staff in the unit would consult with various stakeholders and prepare ideas for a reform plan that would subsequently be endorsed and presented by the minister.

BMZ’s reform: a bit of context

Before analysing the content of the reform plan itself, it is important to contextualise the BMZ reforms by describing how and to what extent change happens in a country like Germany with its own unique history, civil service and political culture. Public governance and politics are generally recognised for being pragmatic and consensus-oriented, and change is typically incremental in nature. Government coalitions have been stable and early elections are the exception rather than the rule. The federal state structures and representation, as well as the relative independence of government ministries guaranteed by its constitution are among the institutional features that help explain these patterns of governance.

Germany also avails of a detailed – if also fragmented – system for designing and managing its bilateral development cooperation, which in addition to the two largest organisations of GIZ (for technical cooperation) and KfW (for financial cooperation) features a minor galaxy of other state and non-state actors that are involved in shaping

and delivering the budgetary resources managed by the BMZ. These include specialised implementing agencies, churches, civil society as well as independent foundations linked to Germany's major political parties with their own overseas representations.

Another key contextual factor is the debate about development cooperation within German society, which in 2024 after years of relative obscurity and tacit societal support became a more frequent subject of debate in the (online) media. During the previous government several parties started to engage more critically with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one particular project involving the construction of a short bicycle lane in Peru entering a seemingly endless loop of debate within the German media. Large farmer protests in Berlin in January 2024 also featured a recurring frame that the German government was underspending domestically and overspending outside its borders. Both frames and media spin suggested a false incoherence whereby Germany was giving other countries those things it is reluctant to provide its own taxpayers with. Hence, discussions on reforming and revitalising German development cooperation already predated the current government's efforts.

A final aspect to highlight is that in the coalition negotiations that began in October 2024 and ended with the new chancellor securing a majority in the parliament (Bundestag) on 6 May 2025, there were disagreements between the two parties as to whether the BMZ should be maintained as a standalone Ministry or subsumed into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Linked to this was the decision whether there should continue to be an independent cabinet-rank minister charged with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within the German government. This discussion had also come up during previous government coalition negotiations, yet it is generally held that the decision to discontinue the BMZ as an independent ministry was closer than ever this time around.

Reform expectations

The BMZ presented its reform strategy on Monday 12 January 2026, in the form of a 28 page document written in German that consisted of a foreword by the minister and further details on future priorities and policy choices. The minister further discussed the plans with journalists during a press conference on the same day, while a two-page summary in English was published on the ministry's website a few days later (and linked to at the end of this piece). The reform plan will guide further actions by the ministry, which among others include a reorganisation to be completed before the summer of this year, and the appointment of a development-policy oriented North-South Commission to further investigate future policy options by a group of independent experts. In that sense, the reform plan marks an intermediate point in time and will guide further reform dynamics and initiatives, as opposed to being the conclusion of that reform process.

Give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ntext, it is important to emphasise that in addition to driving a substantive and financial reform – in the form of communicating new priorities on the what and how (much) of its cooperation – the reform plan also reflects a discursive shift and presents a new narrative on Germany's development policy. Although the reform plan reflects both functions, these need not to be fully coherent

in practice, because of the diverse objectives and audiences that they address. The substantive and financial reforms predominantly address the actors within the system, setting out new policy priorities and some changes in terms of thematic focus in various regions. The discursive reforms instead reflect changes in how the BMZ and its minister will communicate the essence of Germany's development policy to domestic and international audiences, including politics and the media.

The minister's foreword and overall narrative presented in the reform plan emphasises that the strength of Germany's development policy is found in its continuity and long-term approach, spanning over six decades of cooperation experience. In terms of a discursive shift, the plan is more outspoken and explicit in positioning development policy as being in Germany's national interest – which of course it has been from the onset – by arguing that the country's peace, security and welfare depends on its relations and partnerships with the global south. From this perspective, the minister emphasises that international solidarity should not be regarded as a moral luxury but as a strategic necessity. The minister further emphasises that development policy is both an expression of responsibility towards the current and future generations, as well as – together with defense and foreign policy – an integral component of Germany's security policy. It is these and other new discursive accents that seek to reposition development policy both within the German political landscape and societal debate.

When it comes to the substantive and financial reforms, the reform plan defines four overall goals for its development policy: (1) ending hunger, poverty and inequality, (2) promoting long-term peace and stability, (3) facilitating economic cooperation and (4) strengthening strategic alliances and the multilateral system. Within each of these four areas, further policy accents and reforms are expressed and taken forward. Among many others, these include a stronger focus on the German private sector, a shift of grant-based cooperation towards Least-Developed Countries, a greater focus on working with civil society organisations and finally efficiency-focused reforms within the German development cooperation system.

While ambitious in expression, it is generally said that paper is patient. The reform plan presents the minister's ambition for the repositioning and reform of German development policy, and the coming months will show to what extent and how the main priorities it sets out will be translated into practice. Given the world's geopolitical and economic volatility, other nations will keep a keen eye on how Germany fares in this respect. ■

Link to the English two-pager summarizing the BMZ reform plan:

<https://www.bmz.de/en/ministry/shaping-the-future-together-globally-282836>



이미연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총괄운영팀 전문연구원

leemy@kdi.re.kr

인도네시아 플랫폼 경제 현황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스마트폰이다.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대화하고(전화, 메신저), 공부하거나(학습) 뉴스를 확인하며(정보탐색), 여가를 즐기고(게임, OTT, 웹툰), 실시간 구매를 하는(이커머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한다. 특히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언제든지 주문하고 배송(제공)받을 수 있는 이커머스는 이제 우리 생활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다. 잠자리에 누운 다음에도 갑자기 떠오른 급한 물건을 바로 주문할 수 있고, 또 몇 시간 지나지 않아 현관 앞에서 바로 찾을 수 있다는 편리함에는 이견을 달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협력국의 플랫폼 경제 현황은 어떨까?

인도네시아 플랫폼 시장

인도네시아는 2억 8,000만 명을 상회하는 인구와 1만 7,000개가 넘는 섬으로 구성된 국가이다. 최근 5% 이상 GDP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으며(IMF, 2024), 단일국가가 보유한 세계 최대 무슬림 시장을 기반으로 세계 할랄 소비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인도네시아가 가장 각광받는 부분은 이차전지의 원료인 니켈 매장량을 기반으로 한 공급망 주요 국가로서의 측면이다. 이렇듯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플랫폼 경제는 어떠한 모습일까? 인도네시아의 플랫폼 경제는 차량호출, 음식배달, 전자상거래, 전자결제 등에서 매우 활발히 돌아가고 있다.

차량호출서비스

자카르타 도심에서는 어디에서나 모빌리티 서비스의 로고가 적혀 있는 유니폼과 헬멧을 착용한 라이더를 볼 수 있다. 자카르타의 러시아워 교통체증은 매우 극심한 편이며, 2025년 기준으로 자카르타의 대중교통 분담율은 20% 수준이다.¹⁾ 이러한 여건에서 교통체증에 영향을 덜 받는 오토바이 이동은 자카르타 시민에게 매우 합리적인 선택일 것이다. 차량호출서비스는 일반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서비스를 제공하는 라이더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한다.

반둥공과대학교의 연구²⁾에 따르면, 2023년 인도네시아 국민의 25%(약 7,300만 명)가 차량호출산업³⁾에 종사 중이며, 차량호출산업의 활성화로 음식, 식재료 등을 판매하는 인도네시아 중소기업(MSMEs) 매출이 70% 이상 증가했고, 매출 증가분의 대부분은 차량호출앱 가입 이후 발생했다. 서비스 금액에서 플랫폼 수수료 등을 제외한 부분이 라이더의 소득이므로, 차량호출산업의 성장에 따라 종사자의 소득이 함께 증가함을 짐작할 수 있다.

2023년 인도네시아의 모빌리티 라이더와 차량 운전자는 350만 명 규모이며, 소득이 라이더는 이전에 비해 약 140만 루피아, 자동차 운전자는 약 550만 루피아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이 발표한 월평균 임금 300만 루피아와 비교하면 소득증가 효과를 짐작할 수 있다. (그림1)

1) Urban Transport Profile
2024 (Asian Transport
Observatory)

2) Ride Hailing Industry 2023
(ITB BANDUNG)

3) 차량호출(Ride-
Hailing)산업에는 차량,
오토바이를 활용한 이동서비스
및 오토바이를 통한 음식,
생활배송 서비스를 포괄한다.

전자상거래

인구 2억 8,000만 명으로 거대한 소비시장인 인도네시아의 2024년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약 790억 달러이며, 동남아시아 내 전자상거래 규모 1위, 아세안 시장의 51.5%를 차지하며 향후 지속 성장이 예측된다. (그림2)

인도네시아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종합몰과 오픈마켓의 하이브리드형인 '쇼피(Shopee)'와 오픈마켓 위주인 '토코페디아'가 점유율 1, 2위를 차지하며, 최근에는 라이브커머스 방식이 확대되고 있다. 다만, 인도네시아 통계청의 2023년 전자상거래 보고서⁴⁾에 따르면 쇼피, 토코페디아와 같은 마켓플레이스(플랫폼)를 통한 거래는 17.8%에 불과하며, 와츠앱 등 SNS를 통한 거래(주문 및 배송)가 95%를 넘는 상황이고, 틱톡,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거래가 30%를 상회한다. 또 전자상거래 결제는 COD(Cash on Delivery)⁵⁾가 75% 이상으로 확인되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신용카드 또는 전자지갑(payment)으로 결제하는 한국의 현황과 다소 차이가 있다.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은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바로 크로스보더 이커머스⁶⁾에 대한 대응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3년 9월, 해외직접구매로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인도네시아 내의 법인, 지사 등을 통한 공식 수입을 통해야 하며, 제품당 최소가격이 미화 100달러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의 신규 규정을 발표했다. 저가 수입품의 유입을 제한하여 자국 중소기업의 경쟁력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이 조치는, 중국의 이커머스 플랫폼이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적으로 점유율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매우 눈에 띄는 대응이다.

2023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의 전자상거래 산업 종사자는 1,2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참여 사업체의 대부분은 중소기업(MSMEs)에 해당한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자국의 제조업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는 이후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플랫폼 경제는 여러 면의 사용자 수요를 증대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산업 다변화의 밑거름이 되기도 하며, 공급자 면에서는 일자리와 소득 증가에 기여한다. 통신망 확충과 휴대전화(스마트폰) 보급을 바탕으로 대부분 국가의 디지털 기반이 일정 수준 이상을 나타내는 가운데, 국민의 실생활에 깊이 침투하여 소비자의 편의를 높이고 공급자에게는 소득증진 기회도 제공하는 플랫폼 경제를 좀 더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특히, 디지털 경제에서 창출되는 다양한 데이터가 디지털 경제 시대의 새로운 석유로 평가되는 가운데, 2억 8,000만 명 규모의 네트워크가 만들어 낼 인도네시아 플랫폼 경제, 나아가 아세안의 플랫폼 경제에 대해 좀 더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성장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4) E-commerce Statistics 2023(BPS-Statistics Indonesia).

5) Cash on Delivery는 온라인 쇼핑에서 주문을 진행한 뒤, 물건이 도착했을 때 배송원에게 직접 현금 지불을 하는 형식이며, 신용카드나 전자지갑 사용률이 낮은 국가에서 주로 많이 활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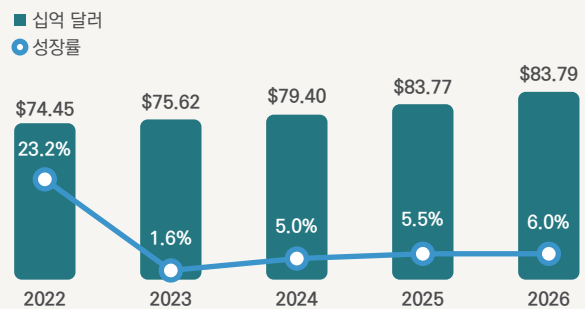
6) 해외직접구매가 가능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뜻한다. 아마존, 이베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이 포함된다.

그림 1 인도네시아 Gojek의 Ride-Hailing Service



자료: FAO(2024)

그림 2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소매 판매액



출처: 2025 Gobiz Global E-commerce Trend 웹진 GET vol.08 재인용

[2024/25 인도네시아 KSP] 인도네시아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녹색투자 촉진과 제도적 과제



김희라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정책자문2팀 전문연구원

hrkim@kdi.re.kr

인도네시아의 탄소중립 목표와 에너지 전환 배경

인도네시아는 에너지 자립과 녹색 전환을 국가발전 전략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석탄과 화석연료에 의존해 온 기존 에너지 구조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기반의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2060년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국가적 목표와도 맞닿아 있다. 에너지 전환은 전력 부문의 탈탄소화,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 개선, 온실가스 감축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현재 인도네시아 전력 생산의 60% 이상이 석탄에 의존하고 있어, 이러한 에너지 구조는 기후-에너지 전환 목표 달성에 가장 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석탄 기반 전력 생산이 전력시장 전반에 구조적으로 고착화한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저탄소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려면 제도 개선과 함께 대규모 투자 동원이 필수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2024/25 인도네시아 KSP 추진 배경 및 목적

녹색 전환을 추진하면서도 경제 성장을 지속하려면 공공과 민간 투자가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특히 고탄소 활동에서 저탄소 활동으로 자원 이동을 촉진하고, 녹색 혁신과 저탄소 기술의 도입·확산을 뒷받침하려면 공공투자 관리 체계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공공투자는 단순한 자원 투입을 넘어 민간 투자를 유인하고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정책 수단으로 기능해야 한다.

인도네시아의 공공투자 관리 체계는 「정부투자 관리에 관한 정부령(PP 63/2019)」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재무부가 이를 총괄하고 있다. 다만 해당 제도는 녹색 전환을 전제로 설계된 규정은 아니며, 최근 강화된 기후 공약과 확대되는 녹색투자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제도적 한계를 지닌다. 현행 정부투자 관리 체계는 일반적인 투자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어, 녹색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틀과 재정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배경으로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2024/25 지식공유사업(KSP)을 신청하였으며, 본 KSP는 정부 주도의 녹색투자 이행을 지원하고자 현행 법·제도 및 규제 체계를 점검하고, 향후 제도 개선과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진 1 2024/25 인도네시아 KSP 착수보고회



자료: 저자 제공

녹색 전환을 위한 인도네시아의 투자 정책과 과제

인도네시아의 녹색 전환 정책은 UNFCCC, 의정서, 파리협정 등 국제적 기후 체제와 이에 따른 국가결정기여(NDC)에 기반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강화된 NDC를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무조건부로 31.89%, 국제적 지원을 전제로 최대 43.20%까지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투자 규모는 2030년까지 약 2,450억 달러, 2060년까지는 최대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기후 예산 태깅, 자회사 대출계약, 조세 인센티브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도입하고, PT Sarana Multi Infrastruktur(PT SMI) 같은 전담 기관을 통해 녹색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또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JETP) 등 국제 협력 이니셔티브에도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도 2023년 기준 에너지 부문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59%를 차지하며, 재생에너지 비율은 13.29%로 나타나 2025년 목표치인 23%에 크게 못 미친다. 이는 정책 불확실성과 제도적 지원의 한계, 전력시장 구조 및 요금 체계의 경직성 등으로 민간 투자 위험이 여전히 높게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사진 2 2024/25 인도네시아 KSP 실태조사 - PT SMI 면담



자료: 저자 제공

사진 3 2024/25 인도네시아 KSP 실태조사 - 서자바주 치라타 수상태양광 발전소 기판 견학



사진 4 2024/25 인도네시아 KSP 실태조사 - 인도네시아 재무부



자료: 저자 제공

녹색 전환을 제약 요인

인도네시아의 녹색 전환이 당면한 제약 요인은 단순한 자원 부족이 아니라 제도적·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 주요 기관 면담과 실태조사 결과, 녹색투자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은 ▲범부처 차원의 정책 조정과 법·제도적 기반 미흡, ▲에너지 전환에 적합한 투자 수단과 민간 참여 유인 부족, ▲전력요금·탄소가격·사회적 보호 장치 등 에너지 전환 관련 위험 관리 체계 미정립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요인은 재생에너지 및 저탄소 기술 분야에 대한 장기 민간 투자 유입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녹색 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

인도네시아의 녹색·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려면 다음 세 가지 정책 방향이 핵심적으로 요구된다.

첫째, 고위급 리더십하에 범부처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녹색 전환 관련 법·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제한적 양허 방식(LCS)의 재생에너지 분야 확대와 PT SMI의 기능을 강화해 공공투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민간 자본을 효과적으로 유인하는 투자 수단을 확충해야 한다.

셋째, 탄소가격 제도와 사회적 보호 장치를 포함한 시장 기반 투자 환경을 조성하여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시장·사회적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 간 전력망 격차를 해소하는 전력망 현대화와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확산 역시 병행되어야 한다(세부 내용은 표 1 참조).

<표 1> 세부 주제별 주요 정책 제언

세부 주제	주요 정책 제언
1 녹색투자 이행을 위한 규제 체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하에 범부처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여 녹색-에너지 전환 정책의 일관성과 조정 기능 강화 정치적 주기와 무관하게 정책이 지속되도록 녹색 전환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필요한 경우 신규 입법 추진 정부투자 및 녹색금융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민간 부문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2 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 수단, 투자자 참여 및 인센티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산 재활용을 통한 민간 자본 유입을 확대하도록 제한적 양허 방식 (Limited Concession Scheme, LCS)을 재생에너지 자산으로 확대 적용 PT 사라나 멀티 인프라스트럭처(PT SMI)를 정책금융기관으로 전환하여 기능과 권한을 확대하고, 자본 확충 및 제도적 자율성 강화 규제 개혁과 전력망 현대화로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도입과 확산 촉진
3 에너지 전환을 위한 위험 관리 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용 부담 및 투명성 제고로 국영기업(SOE)의 역할과 책임 강화 탄소가격 제도, 사회적 탄소비용, 재생에너지 투자 인센티브를 연계한 시장 기반 투자 프레임워크 구축 전기요금 바우처 등 맞춤형 사회적 보호 장치를 도입하여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고 사회적 수용성 제고

자료: 2024/25 KSP Policy Brief 'Implementing Strategy for Green Investment for the Indonesian Government'.

What's next?

본 KSP의 정책 권고는 향후 「정부투자 관리에 관한 정부령(PP 6 3/2019)」 개정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되어, 공공투자 결정에 녹색투자 원칙이 더 체계적으로 반영되고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정부투자 관리 체계는 단순한 투자 관리 차원을 넘어,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는 정책 수단으로 기능할 것이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폐기물 관리, 재생에너지, 수자원 관리 등을 핵심 협력 분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구조적 과제를 해결하고 정책 역량에 대한 수요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사진 5 2024/25 인도네시아 KSP 최종보고회



자료: 저자 제공



윤지희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연구실 전문연구원

jhyoon@kdi.re.kr

아태지역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영향 및 대응 방안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개념과 도입 배경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이 가속화되면서 국가 간 환경 규제 수준 차이에 따른 '탄소 누출(carbon leakage)' 문제가 국제 통상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탄소 누출이란, 자국의 엄격한 탄소 규제를 피하고자 기업의 생산 거점이 규제가 느슨한 국가로 이전되거나, 규제가 약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양이 증가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약화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고자 도입된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는 수입 제품이 생산 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비용을 국경에서 부과하는 제도이다. 수입업자는 역내 생산자가 부담하는 탄소 비용과 동일한 수준으로 CBAM 인증서를 구입해야 하며, 이는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무역 규제에 평가된다.

EU CBAM의 시행과 글로벌 통상 질서의 변화

유럽연합(EU)은 기후 정책 패키지인 'Fit for 55'의 핵심 수단으로 CBAM을 도입하였으며, 2026년 1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초기 적용 대상은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수소 등 6개 고탄소 집약 산업에 한정되어 있으나, 향후 제도가 안정화되면 적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주목할 점은 CBAM이 EU에 국한되지 않고 영국(2027년 예정),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게 CBAM이 단순한 환경 규제를 넘어 새로운 통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시아태평양(아태) 지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 연구에서는 아태지역을 중심으로 CBAM이 무역·산업 구조 및 수출 경쟁력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시나리오별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이 분석은 배출 범위(Scope 1~3)와 CBAM 도입 권역의 단계적 확대, 그리고 역내 정책 대응에 따른 충격의 크기의 분포 변화를 비교하는 데 초점을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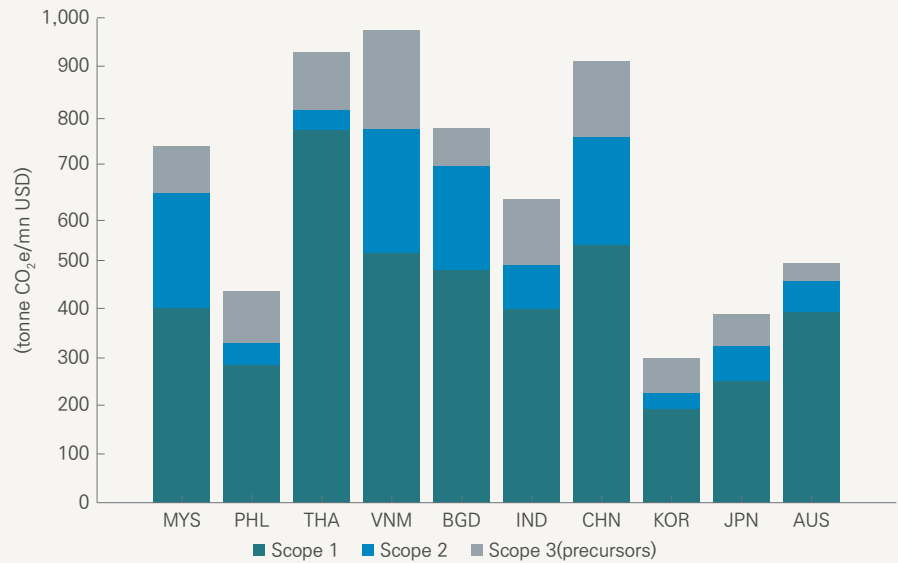
<표 1> CBAM의 아태지역 영향 분석 정책 시나리오

구분	배출 범위 및 내용	적용 대상 산업	CBAM 도입 권역 (CBAM 전제조건)
시나리오 1	Scope 1 (직접배출만 적용)	c9, c11, c12	EU, 노르웨이, 영국
시나리오 2	Scope 1 + Scope 3 (제품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중간재 단계의 간접배출 포함)	c9, c11, c12	EU, 노르웨이, 영국
시나리오 3	Scope 1 + Scope 2 + Scope 3 (전력 사용 및 원재료 투입 과정의 간접배출 모두 포함)	c9, c11, c12	EU, 노르웨이, 영국
시나리오 4	시나리오 3의 배출 범위(Scope 1~3)에 CBAM 도입 국가 확대	c9, c11, c12	EU, 노르웨이, 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
시나리오 5	명시적 탄소 가격 인상 (10 USD/tCO ₂)	c9, c11, c12	EU, 노르웨이, 영국
시나리오 6	명시적 탄소 가격 인상 (10 USD/tCO ₂)	c17	EU, 노르웨이, 영국
시나리오 7	탄소저감기술 지원 (탄소탄력성 감소)	전 산업	EU, 노르웨이, 영국

주: 화학제품(c9), 비금속광물제품(c11), 1차 금속 및 금속가공제품(c12), 전력공급산업(c17).
자료: 저자 작성

아태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탄소 가격과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에너지 구조여서 산업 평균 배출집약도가 높게 형성되어, CBAM 충격에 가장 크게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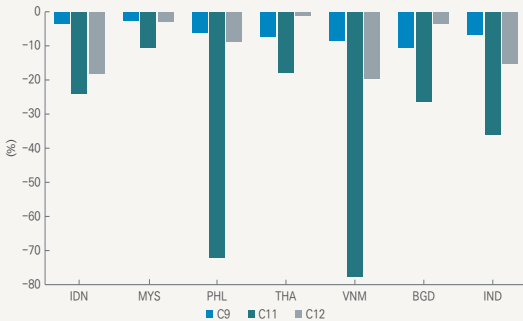
그림 1 국가별 CBAM 산업 평균 배출집약도



주: 인도네시아는 니켈 산업의 배출 강도가 과도하여 분석에서 제외.
자료: 저자 작성.

산업 및 국가별로 충격의 편차도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거시적 차원의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비금속 광물(c11)과 1차 금속 산업(c12) 산업에 충격이 집중되었으며, 탄소배출계수가 높은 말레이시아, 베트남, 방글라데시의 수출 감소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반면 재생에너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태국은 동일한 조건에서도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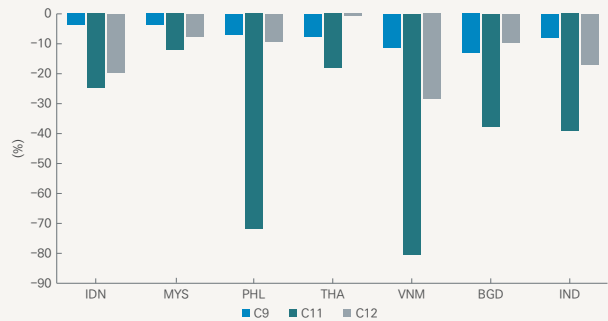
그림 2 국가·산업별 대-CBAM 도입국 수출 변화(시나리오 2)



주: 인도네시아는 니켈 산업의 배출 강도가 과도하여 분석에서 제외; 화학제품(c9), 비금속광물제품(c11), 1차 금속 및 금속가공제품(c12).

자료: 저자 작성.

그림 3 국가·산업별 대-CBAM 도입국 수출 변화(시나리오 3)



자료: 저자 작성.

특히 배출 범위(Scope) 확대에 따른 위험은 단순 누적을 넘어 비선형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직접배출(Scope 1)만 고려할 경우에 비해 전력 사용(Scope 2)과 중간재 투입에 따른 간접배출(Scope 3)이 포함될수록 아태 국가들의 부담은 급격히 확대되었다. 전력 믹스의 탄소 집약도가 높은 베트남은 간접배출을 포함한 시나리오에서 비금속광물 산업의 수출이 최대 80% 이상 감소할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또 CBAM 도입 권역이 EU를 넘어 미국 등으로 확대되면 지역 전체의 수출 감소 폭은 더욱 확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대응을 비교한 결과, 국내 탄소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은 CBAM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지만 생산 비용 상승이라는 한계를 동반하였다. 반면 저감 기술 지원 정책은 관세 절감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으나 추가 비용 부담 없이 배출집약도를 낮춤으로써 총수출을 방어하는 데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점 및 정책 제언

이 연구의 결과는 CBAM 대응이 단일 정책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탄소 가격, 기술혁신, 제도 정비를 결합한 종합적 정책 패키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국가 차원에서는 탄소세나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명시적 탄소 가격 체계를 정비하여, 국외로 이전될 수 있는 탄소 비용을 국내로 환류시키고 이를 재생에너지 및 저탄소 기술 투자로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수소환원제철과 같은 핵심 감축 기술의 확산을 지원함으로써 산업 구조 전환을 촉진하고 중장기적 감축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더 나아가 아태지역 차원에서는 기술, 금융, 표준을 연계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저탄소 기술력과 기후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기후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지역 내 탄소 측정·보고·검증(Measurement, Reporting, Verification) 체계를 고도화함으로써 배출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러한 다층적 대응으로 아태 국가들은 CBAM의 단기적 충격을 완화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녹색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CDI 연구보고서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영향 분석: 아태지역의 무역환경을 중심으로



연구 바로가기

※ 이 원고는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영향 분석: 아태지역의 무역환경을 중심으로”(2025, 김정욱, 임희현, 김민정, 윤지희, 박슬지)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KSP 출장 소회 서면 인터뷰



문유빈

YKSP 9기

25/26 페루 KSP 인턴

binzzang6247@naver.com

사진 1 2025/26 페루 KSP 착수보고회



자료: 저자 제공

본인의 경험과 관련하여 이번 YKSP 9기에 지원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지식공유를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협력에 기여하고자 지원했습니다. 착수보고회부터 종료 보고회까지 전 과정을 경험하며 전문가들의 논의를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식공유 사업의 실제 운영 메커니즘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2025/26 페루 KSP 착수 보고회 및 실태 조사에 다녀오셨는데, 출장 기간 전후로 어떤 역할을 담당하셨나요?

출장 전에는 현지 이동 경로와 생활 정보를 조사해 일정 운영이 원활하도록 지원했습니다. 출장 중에는 회의록 작성, 사진 촬영, 차량 동선 확인 등 현장 지원을 담당했으며, 복귀 후에는 회의록 보완과 자료 정리 등 후속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출장 동안 전반적인 소감은 어땠나요?

금융, 제도, 과학기술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논의를 접하며 시야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양국 전문가들이 사업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정립해 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정교한 사전 조율이 사업을 추진하는 필수 토대임을 깨달았습니다.

YKSP가 궁금하다면?



@young_ksplans

이번 출장을 다녀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 KOTRA 리마무역관에서 들은 설명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정권 교체로 담당자가 바뀌거나 인수연계가 미흡해 사업이 지연·중단될 수 있다는 현지의 실무적 고충을 접하며, 정치적 리스크 관리가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착수 보고회에서 무엇을 배웠으며, 향후 다짐과 YKSP 활동으로 얻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 이번 착수 보고회는 이해관계 조율을 거쳐 사업 방향이 구체화되는 과정을 지켜본 뜻깊은 기회였습니다. 앞으로 연수와 최종 보고회에 참여하며, 계획이 페루에 맞춤형 정책 제언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살피고 사업 실무의 흐름을 깊이 있게 익히고 싶습니다. ■

사진 2, 3 2025/26 페루 KSP 착수보고회



자료: 저자 제공

행사

ADBI 정책 라운드테이블 Shaping Asia's Future Prosperity with Quality Growth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 세계은행(World Bank), OECD 등 주요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지난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정책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ADB가 향후 2년간 추진할 플래그십 프로젝트인 '질적 성장을 통한 아시아의 미래 번영(Shaping Asia's Future Prosperity with Quality Growth)'의 출범을 공식화하고, 이를 지원하는 글로벌 협력체계를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현장에는 국제기구, 글로벌 선도 싱크탱크, 아시아 중진국 정부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하여 아시아의 고소득국 전환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밤방 브로조네고로 ADBI 소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아시아 개도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고 중진국 함정을 탈출하는 새로운 경로를 제시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대희 KDI 부원장은 "개방과 혁신, 경쟁시장, 건전한 거버넌스 등 성공의 공통분모를 각국 상황에 맞게 최적화해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경험이 유용한 참고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들간 진행된 세션에서는 중진국 함정 극복의 모범 사례로 한국, 폴란드, 칠레가 소개되었으며,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 아시아 주요 6개국의 정책적 접근 방식과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2027년까지 '거시경제 안정, 지역 통합 및 산업 정책, 혁신과 디지털 전환, 포용적 개발, 지속 가능한 인프라'라는 5대 핵심축을 중심으로 정책 대화와 공동 연구를 지속할 예정이며, 그 최종 연구 결과물은 2027년 5월에 발간될 계획이다. ■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주요 연구 및 협력 실적

💡 2025년 국제개발협력연구

<p>I. 개발협력 정책연구</p>	<p>경제안보를 위한 국제개발협력: 식량·물·에너지 안보를 중심으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안보의 중요성과 식량·물·에너지 안보 관련 개념 및 국제 동향 분석 ■ 아시아 중점협력국의 식량안보 수준과 현안 분석 ■ 에너지안보 개념 변화 및 국제협력을 통한 에너지안보 강화 전략 분석 ■ 식량·물·에너지 넥서스 기반 안보 개념 확립 및 국제개발협력 가능성 협력방안 도출 <hr/> <p>개발도상국 물가·생산성 변화와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와 인플레이션 사이의 비선형성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기후변화와 생산성 간 상관관계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국제기구·지역별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 동향 및 전략 분석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적응(adaptation)으로의 국제개발협력 시사점 도출
<p>II. 지역·국가 심층연구</p>	<p>국제개발협력을 통한 해외직접투자 유치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공유와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해외직접투자 유치 요인 및 효과 분석 ■ 베트남 산업단지 개발 사례를 통한 해외직접투자 활성화 경험 분석 ■ 한국과 베트남 경제구역 비교를 통한 한국기업 참여 전략 제시 ■ 관련 국제개발협력의 정책적 시사점 도출 <hr/> <p>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활용 제고를 위한 호혜적 국제개발협력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프리카 역내무역 추이 및 경제통합 현황 분석 ■ AfCFTA 협정 주요 내용 및 의의 검토 ■ RTA 효과 분석을 통한 AfCFTA 이행 시사점 도출 ■ AfCFTA를 활용한 호혜적 국제개발협력 방안 모색 <hr/> <p>탄소국경조정제도의 영향 분석: 아태지역의 무역환경을 중심으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아태지역 무역·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 분석 ■ 국가별 대응 역량을 평가하여 한국의 기후 ODA 및 국제개발협력 전략에 대한 시사점 도출 <hr/> <p>디지털 전환과 디지털서비스 무역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서비스 무역의 개념과 특징 분석 ■ 디지털 무역 이론 및 ASEAN·인도-태평양 지역 정책·규제 동향 분석 ■ 디지털 전환과 무역 확대가 개도국 성장·무역·소득 불균형에 미치는 영향 도출 ■ ASEAN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국제협력 방안 모색
<p>III. 한국발전경험 체계화 연구</p>	<p>국제협력과 지식공유 2025: 사례와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협력국의 분야별 정책사례에 대한 개별적 연구·조사(Case Study) ■ 몽골/주택금융, 베트남/농촌개발, 코스타리카/탈탄소, 헝가리/교통 정책의 사례를 통해 이와 관련된 사례 및 요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 KSP, EIPP 정책자문사업에 시사점 도출

 국제협력사업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개발원조(ODA) 전정부적(Whole of Government) 조정 거버넌스 공동연구
아시아개발은행 연구소(ADB)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eyond Boundaries: Navigating the Digital Landscape for a Green and Inclusive Future
아시아개발은행 (ADB)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리랑카 국가개발계획 지원
아시아생산성기구 (APO)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리랑카 국가 생산성 마스터플랜 개발 ■ APO Productivity Outlook 2025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PO Productivity Outlook 2024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키스탄 국가 생산성 마스터플랜 개발 ■ 중고소득국의 생산성 향상과 경제구조전환에 대한 정책연구 ■ APO Productivity Outlook 2023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PO Productivity Outlook 2022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국가 생산성 마스터플랜 개발 ■ 라오스 국가 생산성 마스터플랜 개발
세계은행(WB)	2024-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법제도의 디지털화와 접근성 강화에 관한 가이드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VID-19의 외국인고용허가제(EPS)에 대한 영향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시장 수요변화에 따른 숙련도 제고 정책연구사업 ■ 글로벌경제성장기금(GFGD) 사업 3차(카메룬, 서부발칸)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경제성장기금(GFGD) 사업 2차(10개국 개별 사업 및 성장 모형, 공기업 개혁 연구)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경제성장기금(GFGD) 사업 1차(8개국 개별 사업 및 거시경제, 포괄적 성장 연구)
미주개발은행 (IDB)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DB Invest 협력사업: 한국의 디지털 전환 및 생태계 연구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틴아메리카와의 한국 인프라 서비스 지식공유 및 공동연구
유럽부흥 개발은행(EBRD)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집트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연수·연구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BRD-KDI 공동 민관협력(PPP) 지식공유 콘텐츠 개발사업
유엔개발계획 (UNDP)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DI-UNDP 에티오피아 국가계획위원회(NPC) 15개년계획 정책자문 사업
적도기니 재정경제기획부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도기니 국가개발계획 자문사업
아부다비 개발기금(ADFD)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랍에미리트 ADFD 수출금융프로그램 타당성조사 사업

 국제 행사

<p>2025</p>	<p>KDI-LPEM 공동 세미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장소: 2025년 8월 21일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주제: 불확실성 시대, 포용적 성장을 위한 글로벌 가치사슬의 발전 방안 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장소: 2025년 12월 11일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주제: 중소기업(MSME)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부지원정책 <p>2025 KDI-World Bank 글로벌 포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장소: 2025년 9월 25일 / 서울 주제: 경제 전환을 위한 AI: 혁신과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는 지식 파트너십 구축 <p>영국 앨런튜링연구소(Alan Turing Institute): 인공지능 표준 및 규제 공동 세미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장소: 2025년 11월 18일 / 영국 런던 주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AI 표준화 및 규제 제도 방안 <p>ADB: 정책라운드테이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장소: 2025년 12월 9일-10일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주제: 질적 성장을 위한 아시아 미래 번영 구축
<p>2024</p>	<p>세계은행: KDI-세계은행 녹색성장세미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장소: 2024년 2월 28일 / 워싱턴D.C. 주제: Green Transition Strategy, Green Transition Financing, Carbon Pricing 등 <p>브루킹스연구소: KDI-Brookings Joint Semina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장소: 2024년 10월 22일 / 워싱턴D.C. 주제: Digital Technology, Inequality, and Global Economic Convergence <p>ADB: 2024 글로벌 포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장소: 2024년 12월 17일(화) / 동경 주제: 글로벌 공급망과 지속가능발전 <p>헝가리 인공지능 정책 및 규제 제도 공동 세미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장소: 2024년 10월 3일 / 헝가리 부다페스트 주제: 인공지능 정책과 규제 제도 방안: 규제, 공공서비스, 혁신
<p>2023</p>	<p>브루킹스 연구소: KDI-Brookings Joint Semina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장소: 2023년 4월 11일 / 워싱턴D.C. 주제: Productivity in a Time of Change <p>ADB: ADB 연차총회 “한국 세미나의 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장소: 2023년 5월 2일 / 인천 송도 주제: 아시아 복합위기 대응 방안, 글로벌 공급망개편과 아시아 역내 협력 강화, 디지털 전환, 코로나 19 이후 재정관리체계 등 <p>ADB: ADB 연차총회 부대행사“KDI-ADB 공동세미나: 디지털, 기후, 그리고 회복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장소: 2023년 5월 4일 / 인천 송도 주제: 디지털 전환과 기후 효과 <p>세계은행 TDLC: 2023 KDI-WB TDLC 공동 글로벌 포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장소: 2023년 11월 17일 / 인천 송도 주제: 개발도상국 발전 제약요소 및 기회 분석, 도시 정책, 지식기반 발전 등
<p>2022</p>	<p>2022 KDI 글로벌 포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장소: 2022년 10월 21일 / 서울 주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디지털 정책 사례와 협력
<p>2020</p>	<p>2020 KDI 글로벌 포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장소: 11월 19일(목) 14:00~16:00 / 서울 주제: 개발을 위한 혁신 *기업과 혁신, 도시와 혁신, 기술과 혁신



KDI CID 지식공유브리프 발간지 목록

2025년 4호 ▶	
2025년 KSP 성과공유 콘퍼런스	KDI 조동철 원장 기조연설 「KSP,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혁신적 플랫폼」 패널 토론 주요 내용 행사 스케치
이슈톡	KSP와 EDCF의 전략적 연계 강화를 위한 제언 박종규 ▶ AI 시대의 새로운 질서, AI 에이전트와 표준 경쟁 이강찬 Australia's Climate Change Prioritie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Partnerships 호주 외교통상부
동향 분석	일상과 산업의 숨은 힘, 측정과학을 통한 KSP 협력 김광섭 ▶ 글로벌 식량위기 시대, 한국 농업개발협력의 전략과 과제 김태화
KSP 포커스	[2024/25 키르기스공화국 KSP] 수원국 주인의식 제고를 위한 ODA 모니터링·평가 역량 강화 성현지 [2024/25 폴란드 KSP] KSP의 주요 성과와 시사점: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AI 사이버보안을 아우르는 새로운 협력의제 구축 이세훈
CID 연구포커스	디지털 전환 시대, 페루 보건의로 혁신과 한-페루 협력 가능성 홍기현
2025년 특별호 ▶	
특별호	국제 경제 및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및 지식공유사업(KSP)의 역할 강성진 주요 공여국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주요 특징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광재성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 새로운 경제협력 전략과 지식공유사업의 역할 홍성창, 방호경
이슈톡	EIPP는 KSP의 대안이 될 수 있나? 손의영 ▶ AI를 위한 NETWORK 이정기
동향분석	아세안 경제공동체의 도전과제와 한국의 경제협력 방향 윤지희 말레이시아 디지털 헬스케어 현황과 한-말레이시아 협력과제 송지은
KSP/EIPP 포커스	Accelerating Digital Synergies: What Opportunities for a Strengthened EU-ROK Partnership? Giulia Torchio 디지털 금융 혁신과 국제개발협력: 우즈베키스탄 KSP Plus 사례를 통한 시사점 우혜영, 정희선 ▶ 온두라스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발전을 위한 지식공유 성과 최진아
CID 연구포커스	기후변화 대응 관련 쟁점 및 현안: 국제개발협력을 중심으로 김대용, 김지원 ▶
2025년 2호 ▶	
이슈톡	지식공유사업(KSP)이 나아갈 방향 손욱 핀테크(디지털금융)의 발달과 소득 불균형 이종화
동향 분석	칠레 핵심광물 개발 현황과 한-칠레 공급망 협력 방안 강나연 한-호주 기술협력 사례로 본 공급망 안정화 전영진
KSP 포커스	[2024/25 온두라스II KSP] 인프라 및 교통정보시스템 개발 전략 수립 서예주 중소기업 발전 지원을 위한 캄보디아 신용보증공사의 지식공유 여정 최진아
CID 연구포커스	디지털무역과 국제개발협력의 과제 김민정, 노다현 ▶

2025년 1호 ▶	
이슈톡	한국경제 발전과정에서 금융의 역할 고승범 지속가능교통을 위한 저탄소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강성철 ▶
동향 분석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민간협력사업(PPP) 구석모 ▶ 2025년 세계건설시장 유망 섹터 전망 및 시사점 정지훈
KSP 포커스	튀르키예: 수입대체산업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 윤근영 페루: 모든 이해관계자의 편익을 증진하는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박미서
CID 연구포커스	개발도상국 개발금융 역량강화체계화 및 지식공유 고도화 방안 김대용, 이진이
2024년 특별호 ▶	
이슈톡	기후위기와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논의 동향 강성진 ▶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와 미국 대선 후 산업·통상정책 박지형 디지털 격차와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정책동향 김서용
동향 분석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한선이 ▶
KSP 포커스	[2023/24 불가리아 KSP] 미래에 대응하는 불가리아 건설사업의 도전과 기회 김지원
CID 연구포커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개발협력: 기술 협력을 중심으로 방호경 신용보증제도 사업 기획 시사점: 베트남 신용보증제도를 중심으로 최다인, 하지유
2024년 3호 ▶	
이슈톡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와 KSP 사업에 대한 시사점 최희주 유럽 공급망 실사지침과 우리 기업의 대응 오범택 ▶
동향분석	한국 주택정책의 성과와 KSP 사업에 대한 시사점 권혁신 ▶ 개발효과성 담론에 대한 한국의 기여: GPEDC와 부산포럼을 중심으로 송지선
KSP/EIPP 포커스	헝가리 EIPP: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로의 전환 최효정, 안치영
CID 연구포커스	불가리아 연구개발 현황과 시사점: 소피아테크파크 산학연 협력사례를 중심으로 남보라, 김하아람
2024년 2호 ▶	
이슈톡	기후 문제에 대한 개도국의 시각 정홍상 ▶ 디지털헬스케어의 중요성 및 지식공유의 의미 강재헌
동향 분석	국내 수소산업의 동향 및 시사점 이슬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경험의 지식화와 수도이전 국제협력 추진방안 방설아 ▶
KSP 포커스	[2023/24 칠레 KSP] 병원 대기 끝에 죽음이 아닌, 회복과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홍기현
CID 연구포커스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실현을 위한 ESG, 무역을 위한 원조(AfT)의 역할 및 정책과제 김대용, 황서영
2024년 1호 ▶	
이슈톡	ESG와 국제개발협력 정무경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 발주 확대에 따른 대응전략 정지훈 ▶
동향 분석	순환경제로의 전환, EU는 어떻게 추진해 가고 있나? 박상우 중동정세와 향후 전망 강문수 ▶

KSP 포커스	리투아니아와 문화창의산업 (Cultural & Creative Industries) 안치영
CID 연구포커스	아프리카 지역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과 국제개발협력 우혜영, 이소희
2023년 특별호 ▶	
이슈톡	2023년 국제개발협력을 되돌아보며 김은주 2024년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전망: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와 개발금융의 역할 권을 기술협력 ODA,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협력 방호경, 이소희
동향 분석	2023년 동남아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특징 및 전망 이요한 ▶ 2023년 아프리카 ODA의 주요 특징 및 전망 김은경 ▶ 2023년 중남미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특징과 전망 정상희 ▶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 일본의 개발협력 과제와 새로운 대응: 2023년 개발협력대강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김은지 ▶
KSP 포커스	페루 경제특구의 외국인직접투자유치 로드맵 수립 윤근영
CID 연구포커스	탈탄소 기술 품목의 무역저해요인 분석 및 지식공유사업에 대한 시사점 방호경
2023년 3호 ▶	
이슈톡	핵심광물 자원부국과의 개발협력 전략 김연규 해외건설기업 진출현황 및 시사점 정창구
동향 분석	국제협력 플랫폼, KSP의 의미 이미연 유럽연합의 개발도상국 디지털 분야 개발협력 오정은 ▶
KSP 포커스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 KSP 사업 선정의 현황과 과제 이세훈 베트남 창업생태계의 현주소와 단기적 개선 방안 서규혁
CID 연구포커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국제개발협력: 디지털 편 이진이
2023년 2호 ▶	
이슈톡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사후관리가 왜 중요한가? 안충영 ▶ ESG 연계 개발협력과 민간기업의 참여 이준희 ▶
동향 분석	기술협력사업의 PDM 활용 개선방안: 지식공유사업을 중심으로 강경재 보건의료의 철의 삼각(Iron Triangle)과 스마트 헬스케어 김준
KSP 포커스	KSP 주제분류체계 개편 배경 및 주요 내용 노보배 [우즈베키스탄 KSP+]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정책자문 한재현
CID 연구포커스	국제개발협력 생태계 확대를 통한 국내외 청년의 글로벌 기회 확대 우혜영
2023년 1호 ▶	
이슈톡	기술패권 경쟁시대의 국제개발협력 방향 임호열 ▶ 글로벌 불황에 대한 안정망, 국제개발협력 성한경
동향 분석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 개발협력 사업추진 방식의 변화 김은주 ▶ 스마트 생산 분야의 개도국 정책자문 수요와 정책 제언 방향 이재광 ▶ COP 27 손실과 피해의 주요 합의사항 황금물결
KSP 포커스	우즈베키스탄의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핀테크 육성 유성희

CID 연구포커스	지속가능하고 통합적인 국제개발협력 및 지식공유를 위한 정책과제 김대용, 이소희
2022년 3호 ▶	
이슈톡	개도국의 혁신투자는 다다익선인가? 정성철 ▶ 우리나라 '정책자문 ODA 사업'의 과제와 방향성 김성규 ▶
동향분석	개발협력평가와 변화이론(Theory of Change): 가능성과 도전과제 홍문숙 아프리카의 정당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효과적 재정지원 방안 김유나, 홍은선
CID 연구포커스	국제협력과 지식공유 김정옥, 윤지희 중미공동시장의 경제적 효과 및 한국의 중미 개발협력에 대한 시사점 방호경
2022년 2호 ▶	
이슈톡	세계 식량 위기와 국제개발협력 이준원 포스트-코로나 세계에서의 KSP의 중요성 윤석현
동향 분석	COVID-19 이후 디지털 전환과 ODA 김지현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장 메커니즘과 비시장 접근법 논의 동향 황금물결 ▶
KSP/EIPP 포커스	[불가리아 KSP] 디지털 혁신산업단지로의 전환 전략 수립 한재현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의 추진 배경 및 특징 김하아람
CID 연구포커스	연결성과 국제개발협력 홍성창
2022년 1호 ▶	
이슈톡	국제개발협력의 본질과 한국 개발협력체계 발전방향 정혁 보호주의 진영화' 시대의 도래가 한국 개발협력에 던지는 함의와 과제 김양희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법제: 녹색성장기본법에서 탄소중립기본법으로의 전환 장은혜
동향 분석	KSP 고도화 전략과 지식공유사업법(가칭) 홍성창, 김서영, 이미연 국제탄소시장과 ODA 활용 동향 김예림
KSP/EIPP 포커스	[페루 KSP] FTA 양적 확대에서 질적 활용으로, 페루에게 전하는 한국의 경험 김지원, 윤근영 [세르비아 KSP] 도시개발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송지은
CID 연구포커스	2021 CID 국제개발협력 연구 우혜영

▶ 는 KDI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해당 게시판으로 연결, ▶ 의 경우 해당 유튜브 영상으로 연결됨.

지식공유 Brief

독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식공유브리프는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의 원고 기고를 받습니다. (소정의 원고료가 있습니다)

문의 박지은 연구원(044-550-4421, jieunp@kdi.re.kr)

발행 KDI 국제개발협력센터(30149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

발행인 김정옥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편집장 방호경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연구실장

편집위원 김민정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연구실 총괄

편집간사 박지은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연구실 연구원

문의 044-550-4421, 044-550-4280

* 이 자료는 국제개발협력/지식공유 현안에 대한 이해증진과 국제개발협력센터 업무/성과 홍보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개발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